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등기전자서명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 전자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함(안 제50조제2항)

4.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와 같다.

제26조의 제목 “(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을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기기록을”을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를 “담보권설정자”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을 “자격자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등””을 “서면(이하 “확인서면””으로, “제출 또는 송신”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서면등”을 “확인서면”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를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확인서면등”을 “확인서면 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

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단,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당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

4항제2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자신청의 신청정보 등의 삭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장한 신청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의해 전자기록물에 대한 삭제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그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기관이 식별부호 기록)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 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기관이 등 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 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 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 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 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 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와 같다.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 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 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 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 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 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다.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 제한) ----- --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 --- 담보권설정자 ----- ----- ----- ----- ----- --.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p>제33조(등기의 방법)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p>	<p><u>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u>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u>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u></p> <p><u>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u></p> <p><u>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u></p> <p>제33조(등기의 방법) ① ----- ----- ----- ----- -----</p>
--	---

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

-----.

----- 제3의2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

----- 자격자
대리인-----

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
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
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
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
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
면등”이라 한다)를 등기소에 제
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
인서면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
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
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
면(이하 “확인서면”-----
----- 제
출-----.

④ ----- 확인
서면-----
-----.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
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
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
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
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
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
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
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
항의 확인서면등 해당 등기신
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생략)

----- 본인이 서명 또
는 날인하였다-----

-----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
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
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
구) -----

-----.

1. -----
----- 확인서면 등 -----

2. (현행과 같음)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사용자 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 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 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
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
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
자증명서

3. (생 략)

④ (생 략)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④ -----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
증명서. 단, 제45조제1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
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p>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u>3년</u>으로 한다.</p> <p>④ (생 략)</p>	<p>----- ----- ----- <u>제1항에</u> <u>따라 등록한 당시의 기간</u>----- ----.</p> <p>④ (현행과 같음)</p>
---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